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자료	http//www.kipo.go.kr

2012년 12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이상준 팀장(02-2110-5581), 이제오 사무관(02-2110-5609)
- 특허청 정보기획과 김희태 과장(042-481-5163), 이진규 사무관(042-481-5163)

대기업 특허권 피해 증가

□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와 특허청(청장 김호원)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,

○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'10년 6.6%에서 '11년 4.3%로 감소하였지만, 대기업의 경우 '10년 3.2%에서 '11년 5.3%로 비해 증가하였다.

○ 특히, 특허권의 경우 '11년 대기업의 2.5%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'10년 0.7%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와 같은 증가세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.

- 반면, 중소기업은 '10년 2.4%에서 '11년 1.4%로, 벤처기업은 '10년 6.5%에서 '11년 2.3%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지식재산권 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

○ 한편,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'10년 1.7%에서 '11년 2.4%로 증가한 반면, 중소기업은 '10년 2.2%에서 '11년 0.5%로 감소, 벤처기업은 '10년 0.5%에서 '11년 0.8%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아울러,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응을 위한 대기업의 비용은 9,755만원이었으며, 기업의 평균대응비용은 4,864만원으로, 전체 기업의 67.7%가 대응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.

□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8,656개 기업 및 대학·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.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,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□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, 특허정보 활용현황, 특허권 등 도입현황,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,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,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, 대학·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.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ktc.go.kr)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(http://www.kipo.go.kr)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.

□ 붙임: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

붙임 **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**

1. 실태조사 개요

❑ 추진배경

○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파악 및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'08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추진

* '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재권 침해실태조사 실시

- 지재권보호 관련 통계 확보, 침해사례 및 업체대응실태 파악, 향후 정부차원의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 등

❑ 조사 개요

○ 조사내용 : '12년 국내기업 및 대학 · 공공연구기관의 지재권(산업재산권*) 침해피해 현황, 대응 실태 등

*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(브랜드)권, 디자인(의장)권

○ 조사대상(모집단) : '11년을 기준으로 기준연도(출원 '09년~'10년, 등록 '07~'11년)에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,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18,656개 기업 및 대학 · 공공연구기관

○ 표본구성 : 전체 표본 수는 3,652개 (전수조사 1,827개, 표본조사 1,825개)

- 기업의 경우 기준연도에 연평균 출원 10건 이상 또는 5년간 등록 100건 이상을 한 기업은 전수 조사

- 기업의 경우 기준연도에 연평균 출원 10건 미만 그리고 5년간 등록 100건 미만을 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할당 추출(quota sampling)

※표본 할당비율은 기업의 경우 평균 11%

-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출원 및 등록건수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

○ 조사방법 : 설문지 우편발송 후 방문 회수, 피해기업 중 정도가 심한 기업은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

○ 조사결과 : 총 3,652개 (기업:3,652개 중 1,092개 기업이 응답)

- 설문응답률은 43.8%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2.16%

○ 모수추정 : 추출된 표본조사 결과와 층화된 각 집단의 모집단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, 또한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응답률을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(parameter estimates)

2.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

○ 응답기업(1,092개) 중 87개(8.0%)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이를 모집단 전체(18,418개)로 환산하면 796개 기업(4.3%)이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

※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5.3%, 중소기업 4.3%, 벤처기업 4.1%

❑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

○ **[총괄]** 모집단에 속한 기업 중, 796개 기업(4.3%)이 '11년 한 해 동안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

○ **[유형별]** '11년 한 해 동안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2.0%(업체당2.82건)로 가장 높았고, 이밖에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.2%(업체당 1.19건), 0.9%(업체당 2.44건), 1.6%(업체당 2.45건)로 조사됨

○ **[기업규모별]** 특허권 침해를 받은 비율은 대기업 2.5%, 일반 중소기업 1.4%, 벤처기업 2.3%로 대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상표권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2.4%로, 일반 중소기업 0.5%, 벤처기업 0.8%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음

* 기업 유형별 특허 침해 비율: 대기업 0.7%('10년) → 2.5%('11년), 중소기업 2.4%('10년) → 1.4%('11년), 벤처기업 6.5%('10년) → 2.3%('11년)

○ **[출원 규모별]** 전체 침해사례 중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 61건 이상의 다출원 기업의 경우 6.5%로 다출원 기업일수록 특허의 침해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

- 상표권의 경우에도 출원규모가 연평균 10건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피해 비율이 0.4%로 낮았으나 61건 이상 다출원 기업의 경우 6.2%로 나타남

○ **[침해물품의 제조자 및 제조지역]** 전체 피해사례 중 72.6%는 국내기업이고, 해외기업과 개인인 경우는 각각 22.0%와 0.2%로 조사됨

-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전체의 66.8%로 가장 높고, 중국 및 미국인 경우도 각각 25.9%와 5.9%로 나타남

○ **[침해물품 유통지역]** 전체 피해사례 중 85.6%는 침해제품의 유통지역이 국내이고, 중국과 미국인 비중도 각각 12.8%와 10.7%임

❑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

○ '11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10.9%

-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영업상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비율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57.3%

❑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 현황

○ 지재권 침해에 대해 '경고장 발송'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(62.3%)

침해피해 대응활동		대응하는 비율	대응한다고 응답한 기업에서의 비율		
			행정기관에 단속 및 조사 요청	민·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신청	경고, 합의시도 등 자체 처리
침해 유형	해외제조, 해외판매	25.7%	31.1%	0.0%	68.9%
	국내제조, 해외판매	2.7%	0.0%	0.0%	100.0%
	해외제조, 국내판매	30.3%	0.0%	0.0%	100.0%
	국내제조 국내판매	63.1%	4.1%	11.3%	84.6%

❑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의 애로사항과 정책요구

○ 지재권 침해 시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'대응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'를 꼽은 기업은 전체의 67.7%로 가장 높음

○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으로 '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통관보류 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, 침해물품 국내유입 차단'(66.7%)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

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(단위: %)

정책적 요구사항	실효성있는 행정적·사법적 처벌조치강화	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범위확대 등	지재권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강화	행정기관의 단속권한 강화	지재권 신고 포상금액 증액	침해 대응을 위한 비용지원
전 체	64.9	66.7	65.5	64.5	52.0	65.0
대기업	64.1	64.1	68.1	63.7	58.1	68.0
중소기업	63.7	64.6	61.6	61.7	46.4	55.9
벤처기업	65.8	68.6	67.2	66.4	54.1	69.9